상하이女, 한국 외교 '쥐락펴락'

"탈북자·국군포로 국내송환도 덩씨 통해 성사"

김 前총영사 민감현안 언급…송환작업 악영향

'상하이 스캔들' 파문의 와중에서 탈북자와 국군포로 국내 송환이 중국 여인 덩모(33)씨에 의해 성사됐다는 사실이 공개돼 외교적으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그간 탈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은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 협조 아래 '조용하게'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의 공개는 앞으로 관련 송환작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한·중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지 공관장을 지냈던 김정기 전(前) 상하이 총영사가 언론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정기 전 총영사와 모 영사는 언론과 인터뷰와 소명자료 등을 통해 2008년 11월 상하이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국군포로를 동시에 송환하는 절차도 덩씨를 통해 성사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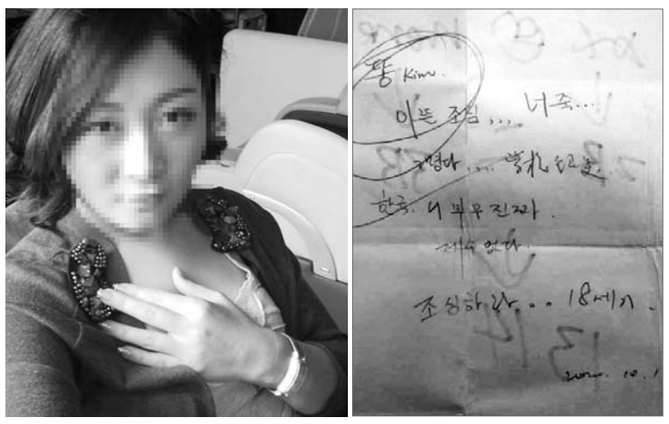
이는 2008년 11월 탈북자 10명과 국군포로 1명이 필리핀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덩씨가 중국 공안당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중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탈북 경로와 과정을 노출시킴으로써 탈북자 송환문제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운신 폭을 좁혀 놓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중국측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상하이 당서기와 한국 고위인사와의 면담 등 민감한 사안에 덩씨가 도움을 준 사례를 김 전 총영사가 열거한 것도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의 공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외교가에서는 김 전총영사 등이 스캔들 관련 해명에 급급한 나머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지 않고 신중치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상하이 스캔들'의 주인공 덩씨. 관광하면서 주로 '셀카'로 촬영한 모습이다. 덩씨의 한국인 남편이 제보한 사진 중 일부이다.(왼쪽) 중국 여성 덩○○씨에게 "내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자필 각서를 써준 K(42) 전 영사가 "덩씨의 협박에 못이겨 받아 각서를 쓴 것"이라며 그 증거로 공개한 덩씨의 협박문. /연합뉴스

정무위 예금자보호법 의결…오늘 본회의 처리

저축은행 부실 해결위해 공적자금 투입키로

국회 정무위는 9일 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개월을 끌어온 예보법 개정안이 11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권 공동계정 설치를 주장한 정부·여당안과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해 온 야당안의 절충안으로, 정부·여당 안에 있었던 금융권 공동계정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 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예보기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금의 절반 이하인 45%를 특별계정에 납부하도록 했다.

특별계정은 결산 및 운영계획의 국회 보고, 정기감사 및 감사 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 국가재정법 및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다만,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축소하는 차등제 도입 조항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감안,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정무위 차원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상의 문제점 등을 담은 백서를 6개월 이내에 발간한다는데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정부출연금 투입과 관련,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금 투입규모와 관련,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올해 일단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10일 "저축은행 부실 경영자에 대한 민형사상 철저하고 혹독한 책임 추궁과 함께 부실자금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감독당국 출신 인사의 퇴직 후 저축은행 취업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합동조사단, 13일 상하이 현지 조사

총리실·법무·외교부 9명

정부는 10일 '상하이 스캔들'의 진상파악을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외교통상부 직원 등 총 9명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오는 13일 중국 상하이 현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조사단은 2개반으로 구성되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 비자 발급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이나 금전 수수 등 비리 여부, 총영사관의 자료 유출 여부를 포함한 보안관리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단은 현 정권 실세와 국회의원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총영사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정황조사와 함께 폐쇄회로(CC)TV 확인도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H씨 등이 덩씨의 부탁을 받고 비자발급 업체 선정, 비자발급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는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그리고 전화번호 이외의 다른 기밀자료 유출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하이 총영사관 측이 덩씨를 상대로 한 교민들의 투서를 묵살했다는 의혹, 덩씨와 추가로 연루된 총영사관 직원이나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하이 총영사관의 전직 영사 법무부 파견 H씨, 지식경제부 파견 K씨, 외교부 P씨 등이 덩모씨와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총영사관 전 직원을 상대로 강도높은 복무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합동점검단이 현지 조사를 벌여도 총영사관 직원들의 증언에 주로 의존해야 하고 덩씨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스캔들이나 기밀유출 의혹의 진상파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날 김 전 총영사를 상대로 기밀자료 유출 경위 및 관여 여부, 부총영사와의 알력 여부 등에 대해 사흘째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씨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는데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진술도 자주 번복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中공안 '덩' 신병 확보한 듯

배경·수사행로 관심

중국 공안당국이 10일 이른바 '상하이(上海)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배경과 수사 행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 이번 사건은 중심 인물인 중국여성 덩모(33)씨가 상하이 한국영사관의 고위층들과 불미스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자관련 이권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중국 공안이 사건 수사에 나선 것은 당초 성추문 수준에 불과해보였으나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국과 중국간 방첩사건으로 비화하는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중국에서도 '대응'이 필요해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따르면 덩씨는 지난 1월 하순부터 중국 공안의 내사를 받아왔다고 한다. 추문이 불거져 상하이 총영사관의 한국 주재관이 귀국조치를 당하면서 중국 당국이 덩씨를 내사해왔으나 구금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8일 한국 언론에 이번 상하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서 덩씨와 주변인물들과의 연락이 끊긴 점으로 미뤄 그 후에 중국 공안이 덩씨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초점은 중국 공안이 덩씨의 한국 기밀유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갈등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면 피하는 중국 공안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방첩에 혐의점을 두고 의욕적인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北 소통시작?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미국인 '맞팔' 요청 화답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운영하는 트위터가 '맞팔'(서로의 트위터를 구독하는 것)을 요청하는 외국 네티즌에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팔로우를 해달라는 미국인 지미 더쉬쿠(Jimmy Dushku·23)씨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로써 더쉬쿠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정과 함께 우리민족끼리의 단 두 명뿐인 '맞팔'이 됐다.

일방적으로 북한을 선전하는 문구만 게시할 뿐 '소통'은 전혀 시도하지 않던 과거의 모습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더쉬쿠씨는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위터와 이메일을 통해 '나는 당신(북한)을 팔로우(follow) 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팔로우하지 않는가. 나를 팔로우 해달라'는 메세지를 보냈더니 단 몇 시간만에 나를 팔로우했다"며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친구를 만들고 싶어 맞팔을 요청하게 됐다"고 맞팔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여야, 韓-EU FTA 4월 국회서 심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0일 "여야가 내달 중순까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 표결처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남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월 중순 임시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후속대책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FTA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서 '4월 처리'가 아닌 '4월 심의'를 합의한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해 후속보완 대책이 충족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또 "여당 측에서 FTA를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심의를 해보지도 않은 채 처리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페루 21일 FTA 정식 서명

한국과 페루가 작년에 가서명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21일 정식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 국영 뉴스통신사인 '안디나(Andina)'는 9일 정부 측 성명을 인용해 양국이 21일 서울에서 FTA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에두아르도 페레이로스 통상관광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지난해 8월 30일 수도 리마에서 열린 FTA 제5차 협상에서 상품과 무역구제, 투자, 지적재산권 등 경제·통상분야에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1년 5개월만에 FTA협상을 타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당시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두달 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의 FTA에 가서명했다.

페루 통상관광부는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첫 몇 년간 양국간 무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상당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